

도, 새정부 국정 반영 · 국가예산 확보 역량 집중

민선8기 3주년 성과 공유 · 재난 대비에도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도내 주요 현안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도정 핵심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민들의 이해를 높였다.

▲국정 과제 반영 위한 '초밀착형' TF 가동

전북자치도는 새 정부 국정 과제 반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지난주부터 서울에 도민주권 현장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사 주재의 긴급 상황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정 과제 반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국정 과제 반영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이 TF는 경제, 사회, 정치, 행정 등 5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의 책임관으로 실국장 및 실무 지원팀장을 지정했다.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일 활동 보고를 통해 대응의 연속성과 밀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실국장들이 상주하며 국정기획위원회 및 국회 활동을 지원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지사 또한 수시로 서울을 방문하여 국정과제 관련 분과위원이나 위원장, 전북 연구 전문위원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6년 국가 예산 '10조 1천억' 확보 총력

2026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기재부) 단계 대응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총 1,541건, 10조 1,174억원 규모의 사업을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이다.

기재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지자체 및 주요 인사 재기 사업들을 심의할 예정이며, 전북도는 이에 맞춰 부처 단계에서 과소평가되거나 미반영된 사업, 그리고 새 정부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중점 사업'을 선정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략회의 운영과 정부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도청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 과 도 시군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 국회의원, 14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참여해 2026년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며, 국가 재정 기초와 전북의 예산 전락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3주년 브리핑 및 원주-전주 통합 논의 가속화 예고

7월 1일은 김관영 도지사의 민선 8기 취임 3주년이 되는 날로, 지사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1년간의 도정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무산된 완주군 도민과의 대화에 대해 도지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다음 날 브리핑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행정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도는 지속적으로 실국 중심으로 지휘부와 완주군 기관 단체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통합에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돼 7월 중 임명될 경우, 주민투표 등 완주군 통합 관련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로 이 문제가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여름철 재난 대비 만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매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현재 총 사업비가 1,587억원 규모로 진행 중이며, 10% 할인이 적용될 경우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8일 국고보조금 309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교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24시간 재난 상황 총괄 관리를 추진하며, 지사를 본부장으로 13개 협업부서와 17개 유관기관 실무반을 편성해 동원 체계를 갖췄다.

특히,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2024년 506개소에서 2025년 5만9,595개소로 대폭 확대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 조력자 매칭 및 비상 물품 지원 등 사전 대피 독려에도 힘쓸 예정이다.

앞으로도 24시간 상황 관리를 지속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대책부부를 상시 가동해 여름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정종복 도의원 "1인가구 등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촉구했다.

정종복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년 후인 2052년 전북의 1인가구 비중은 약 43.5%에 달하고, 대부분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영역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병원동행서비스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동행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수, 수납, 약국 방문 등을 동행인에게 조력 받을 수 있다. 현재 일상돌봄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사업이 있으나, 정 의원은 이를 더욱 확대해 고령층·1인가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대상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이용자의 약 95%가 병원 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며, "현재 전북의 고령화와 1인가구화는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기에, 고령사회로의 전환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병원 가는 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이 키운 인물, 국정원 핵심에

이 대통령, 김희수 기초실장 · 이동수 제1차장 임명

전북이 길러낸 두 인물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개혁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65) 전북대 법대 교수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전북 인실 출신의 이동수(58)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을 국정원 제1차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전북 출신 인재들이 국가 인보와 정보 개혁의 최전선에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먼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교과와 전북대 법대를 졸업한 김희수 실장은 검찰과 학계, 시민사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개혁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온 법조인이다.

김 실장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졸업했다. 이후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서울지방법원 검찰청 북부지청 주사를 거쳐 1995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의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변 변호사 활동, 전북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공권력의 인권 존중과 견제에 앞장섰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2020년 개방형 직위인 경기도 감사관으로 인연을 맺었고, 이후 '쌍방울 대복송금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신뢰를 이어왔다.



김희수



이동수

이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임명은 그가 가진 개혁적 철학과 조직 관리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감찰을 담당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정보기관의 뼈대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로, 김 실장의 임무는 단순한 행정이나 인사 정보 개혁의 설계자 역할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북 인실 출신의 이동수 1차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과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등 정보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실무형 전문가다.

국제 정보수집과 분석, 대외 정보활동 전반에 능통한 그는 해외 안보 정세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국정원 제1차장은 해외 및 대북 분석 업무를 하는 중요 보직으로 특히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를 지켜본 한 도민은 "전북의 인재가 국가정보원을 책임지는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섰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이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지난달 30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개발 규모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더 이상 늦춰선 안돼"

전북 209개 사회단체, 신속한 착공 · 개발 규모 확대 강력 촉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두고 전북 지역 사회단체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경태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지난달 30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의 신속한 착공과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개발 규모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비롯한 도내 사회단체 등 총 209개 단체의 대표와 회원 총 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에게는 50년 항공소외를 해소할 교통권 회복이자, 국가적으로는 새만금 개발과 산업 육성을 견인할 핵심 프로젝트"라며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김경태 수석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업"이라며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는 즉시 착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연합은 특히 지난해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전 정부가 국가 주요 SOC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8개월 이상 지연된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은 국책사업이, 전혀 없는 '적정성 재검토'로 중단됐다"며 "이는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해당 사업이 모든 검토 지표에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 정부 역시 국회에서 공항 지연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견에서는 공항의 '규모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진연합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 2,500m는 양양공항과 함께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짧은 수준"이라며 "양양공항이 활주로 부족으로 적자 운영과 정기 노선 중단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새

만금 국제공항은 반드시 활주로 연장과 계류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선 다양화와 연관 산업 유치 등을 통해 공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기본계획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추진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며 "법원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모순"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북도민의 절절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도청 앞 잔디광장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빠른 착공과 개발 규모 확대를 염원했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박용근 도의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키우는 과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중보건의 제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기초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이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심화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폭 감소하고 봉급 수준도 크게 오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고 처우개선이 더딘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이 시급하고, 공중보건의의 근무여건이나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김슬지 도의원, 이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이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이동친화적인 도시 계획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이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동친화형행사가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빠르면 7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 우수 선진지 답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는 6월 30일과 7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치유 음식관광 활성화 우수 선진지 답사를 위해 백양사 천진암과 강진사찰음식체험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연구회 위원들은 백양사 천진

암을 방문해 정관스님으로부터 사찰음식의 치유 기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찰음식 체험 및 공양을 함께 했다.

이어, 강진사찰음식체험관(이하 강진체험관)을 찾아 흥승스님에게 사찰음식의 효능과 강진체험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직접 음식을 체험해보았다.

/이만호 기자